



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확정

- 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본격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-
-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할 예정 -

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.13.(월) 「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」을 확정했다. 「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「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(2024-2028)」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,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.

- ※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상 5대 목표: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, ②동포 사회와의 연대강화, ③ ▲재외동포 정체성 함양,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,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

정부는 올해 △재외동포 DB 구축, △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, △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. 또한 △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△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, △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·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, △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, △체계적 한글학교 지원, △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힘쓸 예정이다. 이와 함께,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들의 실질적 참정권

보장을 위한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하고,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동포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동포사회 요청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.

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동포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△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의 인식 개선을 통해 귀환 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, △국내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동포청년 인재를 적극 유치해나가고자 한다. 아울러 △K-브랜드를 활용한 한상경제권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, △한반도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재외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정부는 2026년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의 이행 원년으로 삼고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. 또한 정책대상자인 동포들의 목소리가 시행계획 이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동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외교부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	책임자	과장	조민준	02-2100-7581
		담당자	외무서기관	오유찬	02-2100-8345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심의관	곽삼주	032-585-3154
		담당자	외무사무관	성진주	032-585-3156